



광남일보



 <p>농협 광주본부, '농촌에서 놀자' 발대식 광주시농업기술센터와 연중 체험프로그램 운영</p>	 <p>나주, AI 전력예측 시스템 실증 ESS·마이크로그리드 구축</p>	 <p>장흥, 농수산물 수출 500억 달성 '총력' 8개국 초청 수출상담회...375만 달러 수출 협약</p>	 <p>"대중-시민 간 디카시 정착 되도록 노력" 한국디카시인협 광주지부 창립 지부장에 김완</p>
조간 제7828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음력 3월 25일)

광주 중앙공원 '국가도시공원 1호' 추진

광주 중앙근린공원이 국내 최초 '국가 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최대 도심공원으로 조성 중인 중앙근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면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국립지질공원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도시가 된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부는 21일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1지구 조성 현장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공사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중앙근린공원은 1·2지구를 포함해 약 279만㎡ 규모로, 광주 도심의 중심축인 서구 금호동·쌍촌동·풍암동·화정동에 걸쳐 있다. 이는 광주 전체 민간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부는 중앙공원이 광주를 넘어 국가 대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도시공원 1호'를 추진 중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지난 2016년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법률이 통과돼 시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은 없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지자체의 도시공원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공원의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 전체 부지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

또 8명 이상의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도 제



빛고을중앙공원개발부는 21일 오전 광주 서구 중앙근린공원 1지구 일대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중앙근린공원 언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중앙근린공원 1지구 일대의 모습.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국 최대 규모 부지면적·지자체 소유 등에 높은 평가 금호·쌍촌·풍암·화정동 일대 19개 테마·마을숲 조성 풍암호수, 6월부터 폐쇄·정비... '광주 랜드마크' 주목

정돼야 한다. 여기에 도로 및 광장, 조경, 휴양 등의 공원 관련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 중앙근린공원을 비롯해 부산을속도~맥도생태공원, 인천 소래습지, 대구 두류공원 등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곳은 광주 중앙공원이다. 압도적인 부지 면적과 함께 다

로 중앙근린공원의 경우, 다양한 테마의 '도시 숲'도 주목을 받고 있다. 어울림 숲, 청년의 숲, 치유의 숲, 우뚝자 숲, 예방의 숲, 가족의 숲, 활력의 숲, 기록의 숲 등 총 8개 테마로 이뤄진다.

'어울림 숲'은 독특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대규모 도시정원으로 전남지역의 향토수종을 전시해 어린이정원과 시민정원학교, 빗물정원 등의 시설들로 구성된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청년의 숲'은 아시아청년언덕과 청년문화숲이라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아시아청년언덕'은 광주에서 계획 중인 세계청년축제의 보조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취재단

尹 모습 공개...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재판부, 취재진 촬영 허가... "국민 알 권리 고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쿠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서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 퇴장 뒤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대장(대령)을 상대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인 신빙성을 파고 들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상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맞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AI데이터센터는 국가사업...670억 전액 반영 촉구

광주상의 건의문...AI 기술 주권 확보 강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광주의 인공지능(AI)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가 670억원 전액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1일 건의문을 통해 지역에 위치한 국가 AI데이터센터의 운영예산이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있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고비용 인프라 없이 AI 기술 개발과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 25억원만 반영된 것은 국가적 활용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라며 "정부가 이번 사업을 단순한 '지역사업'으로 한정해 분류한 점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면에 계속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전남 강풍·호우 예보...최대 80mm

22일 광주·전남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7~11도, 낮 최고기온 18~22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수준이다.

광주·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55km/h(15%)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영흥민 기자 yhb9792@

변전소는 옥내에, 복합문화공간은 지상에 조성한 주민친화형 변전소

마포구 중부 변전소를 모티브로 제작한 가상 이미지입니다.

"변전소로 나들이 오세요."

"우리, 벚꽃 보러 가요."
"날씨도 좋은데, 산책 다녀올까."

우리 가족의 단골 나들이 장소는 도서관, 산책로, 놀이터 등 복합문화시설로 가득한, 우리 동네 변전소입니다.

놀이터와 도서관,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 가족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을 주민친화형 변전소를 기대해 주세요.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국민의 에너지에 한국전력